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추진상황

1. 추진배경

① (건강)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저가 수입농산물 증가*, 빈번한 식품안전사고** 및 비만·성인병** 등 건강 문제 심화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은 연간 약 29.7조원으로 국내 농업생산량 49.8조원의 약 59.6%

** 불량만두소('04), 멜라민 분유('08), 햄버거병('17) 등 생산자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 발생

*** 국내 성인 비만율 33.2%('15) / 비만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6조 7,695억('13)

전 세계 비만·과체중 인구 21억명(美건강측정평가연구소, '14)

② (지속가능성) 효율성 중심의 대량 생산, 대량 판매는 지역 중소농생산기반을 위협하며, 농약 사용, 푸드마일리지 등 환경부담 증대

③ (먹거리 기본권) 안정적 식량 공급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되고 및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 국내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8.5%(소득 상층은 5.2, 하층 13.6, 국민건강영양조사, '15)

서울시 거주 가구 5.1%는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가 부족(서울시, '17)

④ (지역경제)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집중된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 고령자 증가**, 소비력 저하 및 농업소득 감소 등 경제 침체

* 읍면지역 인구 비중: ('05) 19.5% → ('10) 19 → ('15) 18.5

** 농촌 평균연령: ('05) 41세 → ('10) 42.7 → ('15) 44.8

◆ 생협, 직거래 및 로컬푸드 등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구매 확대와 함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정책 요구 증가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은 문재인정부 농정공약('17.4) 및 100대 국정과제('17.7)로 추진 중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 수립

2. 추진경과

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실무단* 운영하여 핵심아젠다(안) 도출(2~3월)

○ 총 4회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먹거리 이슈 및 연계정책 검토

○ 핵심 아젠다 : ① 건강한(안전·영양), ② 누구나 누리는(접근성·복지), ③ 생태친화적(환경),
④ 더불어 사는(지역순환, 공동체) 먹거리

* (학계·연구기관) 농진청, KREI, 건국대 윤병선 교수, 지역농업네트워크, (지자체) 충남도·경기도,
(소비자·생산자 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 한농연 등

②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구체화를 위한 실무자 협의 및 연구용역 추진(5월~)

- 부내 및 관계부처 실무자 kick-off 회의 실시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배경 및 핵심아젠다 공유, TF 운영 협의
- 핵심아젠다(안)와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구체화 추진
 - 기존 정책, 해외 사례 등 분석을 통해 과제별 세부 계획, 기관별 역할 정립, 조직·인력 운용 및 재정 투자 계획 등

③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범부처 TF 구성

-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계획으로 수립·추진
 - (국조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관리하고 이견 조정
 - (농식품부) 계획수립을 총괄하고 먹거리 생산기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도농 교류 등 전반적인 세부사업계획 마련
 - * 유통정책과 총괄로 각 실·국 협업 추진
 - (식약처)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개선·관리 및 식생활 분야 등
 - (복지부) 식품복지(취약계층 먹거리안전망 등) 및 국민 영양 분야 등

- (교육부) 학교급식-로컬푸드 연계 및 초중고 식생활 교육 등
- (환경부) 폐기·순환 관리, 생물다양성 확보 등
- (해수부)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 단장: 유통소비정책관		국무조정실 (조정지원)
구성원	관련 부서	주요 내용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총괄) 각 국(주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 - 먹거리 공공성 강화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생활 교육 및 건강 증진 - 공동체 중심 먹거리경제 활성화 - 생산기반 구축(농지, 식량자급) -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보 - 먹거리산업 성장동력 구축 -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소비 - 환경 친화적 농업 추구 등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소비자 참여형 식품안전 관리 등
복지부	건강증진과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 교육 및 건강 증진 등 -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보(푸드뱅크 등)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공공성 강화(학교급식) - 식생활 교육 등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자원순환정책과 수도정책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 폐기·순환 관리(음식물 쓰레기) 등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먹는 물)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기 타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기관 실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추세, 국내 먹거리 현안 등 의견 제시

4] 선도지자체를 선정(9개소)하여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2월~)

- 핵심아젠다를 바탕으로 선도지자체별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양태를 종합 분석하여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재반영함으로써 국가-지역 먹거리 전략의 상호 피드백 체계 마련
- 지역 푸드플랜 권역별 설명회 실시(1.4~12/서울·강원·제주, 충청, 영남, 호남) 및 수립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5)
- 공모를 통해 선도지자체 9개소 선정(2.23) 및 착수워크숍*(3.16) 개최

* 지역별 푸드플랜 수립계획 상호 공유 및 지자체 건의사항 의견수렴

<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선정현황 >

구분	도시형(2)	농촌형(2)	복합형(4)	광역형(1)
선도지자체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충청남도

- 공공급식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소비 확대를 위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TF) 구성(7월)

◆ 3개팀(기획, 조사, 성과) 6대 분야*(11개 세부과제)등 업무분장을 완료하고 자체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등 T/F 추진 체계 완비

* ①우리부 산하 공공급식, ②공공기관 급식, ③공공급식, ④푸드플랜, ⑤성과모델 창출, ⑥국가 푸드플랜

○ TF구성

소 속		구성원	
실무반(9명)			
반장(1)		방역정책과 이정삼 과장	
사업기획반(3)		축산경영과 유대열 사무관(총괄), 여종수 사무관, 지정연 주무관(농촌, 6차)	
현황조사반(3)		유통정책과 나인지 사무관(총괄), 이현 사무관, 임정근 사무관(식품)	
성과창출반(2)		유통정책과 김남주 사무관, aT 김재민 차장(공공급식)	
전문가 자문단(10명)			
공공 부문 전문가 (4)	KREI	정은미 박사	
	aT	윤도연 유통기획부장	
	충남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	
	전북 완주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민간 전문가 (6)	푸드 플랜 (3)	지역농업네트워크	김종안 전무이사
		(사)소비자와 함께	문은숙 대표
		서울시 먹거리정책 자문관	배옥병
	일반 유통 (3)	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
		상명대학교	양석준 교수
		엘리스경영연구소	김은정 대표

3. 향후계획

- 우리부 산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구내식당 위탁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기관별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방안 마련 추진(이후 지자체,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
- 공공기관 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급식 지역농산물 구매지원 시스템 구축('19년 신규사업) 및 과일 케이터링 등 신규비즈니스 모델 발굴
-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마스터플랜 마련, 공공급식 지자체 표준조례 가이드라인 마련, 계약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 푸드플랜 수립 지원을 위해 19년 예산 확보(계획수립, 교육, 거버넌스, 통합플랫폼, 공공기관지역농산물 구매지원 시스템, 안전성관리 등), 푸드통합지원센터(직매장, 레스토랑, 급식센터 등) 운영매뉴얼,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설명서,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 9개 선도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평가체계 구축, 대표 지자체를 선정하여 성과모형을 발굴하고 확산 추진
- 지역 푸드플랜을 종합·분석하여 지역 유형별 맞춤형 기초모델* 개발·보급
 - * (농촌형) 도-농 공급협약 및 군소 시·군 수요통합, (도농복합형) 먹거리 지역순환, (도시형) 먹거리 보장 및 도-농 공급협약, (광역형) 도 단위 먹거리 지역순환